

국민과 함께 하는 우리 농업

농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농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생활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란? 어려운 말이 필요없이 감성적, 이성적, 생활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농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기태
(사)한국농동조합연구소 소장

배추파동을 돌아보며

지난 9~10월 국가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배추파동은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면서 별다른 합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6월부터 인터넷포털과 뉴스에서 제기된 4대강 논란은 8월 상추가격 상승에서 힘을 받더니 9월말 배추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반 언론들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가격상승이 기후 때문인가? 4대강 때문인가?”라는 주요 원인 논란이 먼저 진행되더니, 농산물 가격상승에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오는 “밭떼기상의 폭리와 농산물유통구조의 후진성”에 대한 언론의 충고가 나오더니, 이후 연달아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한다. 농가들이 계약에 미온적이다”라는 해묵은 지적이 다시 진행되었다. 이후 “농업관측의 정확성 문제”, “겨울철 시설채소 가격 상승예측” 등 이슈가 확대되다가 배추값이 떨어지면서 이슈는 사라져 버렸다. 가격이 떨어지자 중국배추 수입에 대해 꼬집은 기사만 있을 뿐이었다.

체계적인 문제점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안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슈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앞으로 이런 식의 농업과 관련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

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까? 이번 배추파동이 농업계에 미친 손익계산은 어떨까?

떨어지는 농업계의 발언권과 신뢰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농협이 많게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농산물가격이 올라가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장바구니 물가”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즉각 보도되고, 배추처럼 가격이 폭등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다.

농업인은 전 국민의 7%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는 5천만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가 작을수록, 말하는 입이 적을수록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비율이 적더라도 뉴질랜드나 아르헨티나처럼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농업의 GDP 비율은 2.2%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생산으로도 어디 명함 내밀기 어렵게 되었다.

농촌출신 국회의원이란도 많다면 좋을 텐데 갈수록 인구가 줄다보니 농촌출신 국회의원도 선거할 때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농업계의 발언권은 줄어들고 있다. 꼭 발언권이 높지 않아도 전국민이 농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농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농업관측의 정확성 부족에 대한 지적,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농업계 최대의 조직인 농협의 활동에 대한 불신, 개별분산적인 농업인들의 움직임 등은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추파동과 같은 전국민적인 이슈가 터질 때 농업계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원인분석과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농업계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농업계의 대다수 주체가 우왕좌왕하며 신뢰도를 더 낮추어버리고 있다.

도시소비자들의 변화 방향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 40여년만에 세계 10위권의 수출산업 위주의 공업국가로 전환되었다. 이제 농업은 식량자급을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라 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특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보조산업으로 역할이 변화되었다.

특히 국토면적 대비 인구가 많아 농지가 격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단순한 낮은 농산물가격만을 추구해서는 우리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선진국으로 넘어서는 길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를 한두가지로 국한시키지 않게 되었다. 낮은 농산물가

격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있다고 할 지라도, 안전한 농산물, 얼굴있는 농산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한 농산물에서 머물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과 전처리,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스토리 있는 직거래 농산물 등도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과 체험, 전통과 여유, 고향과 노후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농촌의 장점에 대한 재발견도 도시소비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변화의 이유와 농업의 지체

이런 도시소비자들의 변화는 도시중심의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낳을 수 밖에 없는 결과이다. 아파트와 빌딩으로 꽉 차 버린 회색의 도시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끝없는 경쟁과 실세 없이 터지는 식품 관련 사건들은 도시민들에게 도시가 아닌 농촌, 2,3차 산업이 아닌 인정이 묻어 있는 농업에 대한 갈구를 이끌어내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도시민과 농민들의 상호존중과 교류는 농업과 관련된 안전한 보호망을 제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도 국민적인 동의 아래에서 농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은 한걸음 더 나아가 농촌의 발

전을 위해 지역환경유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동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시소비자들의 의식변화도 더 이뤄져야 하겠지만, 농업계로서도 이런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농업이 소비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의 생산과 실천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걱정스럽다.

감성적 동의에서 이성적 동의, 생활적 동의로

필자는 한칠레 FTA협상 국회비준이 한창 뜨거운 이슈였던 2003년 한 인터넷에서 20대가 쓴 글이 평생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는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생각하면 감성적으로 한칠레 FTA에 반대하고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성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이성적으로 왜 농업보호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유명한 인터넷포털에 글을 올렸다.

솔직히 아직도 그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능력이 나에게에는 없다. 아니 농업계 전체가 자신있게 답할 역량은 물론 그럴 필요성도 아직 못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시소비자들과 함께 우리농업의 발전이 국가발

국민과 함께 하는 우리 농업

전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동의하에 우리농업이 발전하고, 우리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농업계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민에게 단순히 “어려운 농업이니까 도와 달라, 고향인 농촌이니까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70~80년대의 농업만 생각하며 변화된 환경에 둔감하고, 소비자들이 바라는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변화요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목살하는 것도 이제는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것이다.

농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농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농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생활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이란? 어려운 말이 필요없이 감성적, 이성적, 생활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농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민농업을 위한 농업계 노력 필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양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농촌관광, 1사1촌, 학교급식, 도시농업, 귀촌활동, 윤리적 소비를 위한 생협운동, 로컬푸드, 슬로푸드 등 도시에서 시작된 다양한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도시에서 시작된 불씨를 그동안 농업계가 얼마나 잘 지펴 올렸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가능성에 찬물을 붓지 않았는지, 기존의 생각에 매달려 변화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뒤처지지 않았는지 국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농약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농약사용은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강변보다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국민농업은 이런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 이런 도시민과 소비자와 농업계가 연계맺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 농업이 필요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는 연구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안정적인 거래관계 형성은 반드시 농업계 전체가 기본자세로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농업은 이런 안정성과 신뢰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데서 싹터 나갈 것이다. Y